

`22. 7. 21.(목) 14:00

영 상 회 의

제9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임시회) 회 의 자 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9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임시회) 개최계획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7. 21.(목) 14:00~15:30 / ZOOM 영상회의(회의ID 별도 안내)
- (참석대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18명
-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논의

□ 회의안건

- ①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 연장 관련 면담결과 공유
- ② 자치경찰 예산 관련 서면건의 결과 공유
- ③ 「자치경찰사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 관련 논의
- ④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관련 논의
- ⑤ 기타 위원회별 제출안건
 -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22.7.12.) 결과공유
 - (제주) 자치경찰 정책포럼 추진상황
 - (강원)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 관련 우수관서 포상금 지급 선거법 답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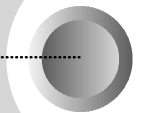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3:30~14:00 30'	○ 회의준비 (장비 테스트 등)	
14:00~14:05 5'	○ 모두발언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4:05~15:25 80'	○ 안건토의	
15:25~15:30 5'	○ 마무리말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9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

회의자료



1

위원회 소속 경찰관 파견 연장 관련 면담 결과 공유

1.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면담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22.7.8.(금) 11:00~12:30, 대통령실(자치행정비서관실)
- 참석자(6명)
 - 대통령실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총경 유승렬, 협의회 회장, 간사 등

□ 면담결과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건의

- 적정한 정원산정 절차 및 근거 없는 **획일적인 정원 배정(시·도별 3명)**으로 **134명의 정원 외 인력이** 각 시·도 사무국에 **파견근무 중(8월말 만료)**이나, **행안부는 정원 확대 곤란, 인사혁신처도 파견연장은 어렵다는 입장** 고수 中
- 현재 사무국 경찰 근무 인력은 각 시·도자경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지속 증원한 것으로 오히려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경찰 인력이 필요한 상황
- 사무국 근무는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他 부처 파견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며,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도 파견 경찰 현원의 정원화 및 현원 유지**는 필수적이기에 대통령실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건의드림

○ 자치행정비서관 답변

- 갑작스러운 일원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134명이 8월말 파견 종료됨을 익히 알고 있고**, 당장 해당 인력 복귀 시 위원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음
- 8월말 파견 만료 문제는 1년 연장이 힘들다면 단기간 단위로 연장하면 될 것이나, 매년 주기가 돌아오고 그 이후는 삭감될 수 있기에 **1~2년 연장이 아닌 정원 확보 또는 재배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 다행히도 경찰청-행안부 간 실무협의체 발족 및 행안부 경찰국 내 자치경찰 지원부서 신설 등 자치경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이 계속 열릴 것이기에 8월까지 해결할 시간이 있고, **관련 부서에도 의견을 전달하겠음**

2. 인사혁신처장 면담

□ 면담개요

- 일시 및 장소 : '22. 7. 15.(금) 14:00 / 정부서울청사 15층 1호
- 참석자(6명)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비서실장, 협의회 회장, 간사 등

□ 면담결과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건의

- 파견 경찰관 파견 기간 만료(8월말)에 따라, 복귀하면 사무국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바, 최소한 현재 인원의 파견 연장은 필요하며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도 파견 경찰 현원의 정원화 및 현원 유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인사혁신처장 답변

- 서울시 차원에서 인력을 확보하여 사무국에 증원하는 것에 대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 정원마저 행안부 소관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또한, 실무 보고 후 검토를 해봐야겠으나,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 파견 경찰관 전원에 대한 파견 연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 현재, 서울의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약 12%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인원이 22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공감함
- 향후, 행안부가 정원을 확보해 줘야 하며 사무국 파견 공무원의 적정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

□ 향후 계획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장 등 면담 추진

□ 인사혁신처 실무진 입장

-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는 처장의 파견 연장 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 파견 감축안을 제시, 경찰청에서 시·도자경위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방안을 통보해주면 해당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 고수

- ▶ (1안) '23년 상반기 인사 시 정원 외 파견자 전원 복귀를 전제로, 전원 파견 연장
- ▶ (2안) '23년 하반기 인사 시까지 단계적으로 파견 규모 감축
 - ※ '22년 하반기 30% 감축 → '23년 상반기 30% 감축 → '23년 하반기 40% 감축

-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의견을 자치행정비서관실과 경찰청에 전달하고,

처장에게 연장 협조를 재차 당부했음에도 담당부서*는 기존 입장 유지

* 정원화 없이 파견 연장은 불가, 금년 1월에 논의했었던 감축방안**을 언급하면서 정원 외 파견의 규모 및 기간(종료시점)에 대해 경찰청과 각 시·도자경위가 조율하여 방향성을 잡은 후에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담당부서 서기관 언동

** 각 자경위 대상 정원 외 파견인력 25%(버림 방식) 감축 동시에 적용 → 총 25명 감축

※ 서울 3명, 부산·인천·광주·경기남·충북·충남 각 2명, 그 외 각 1명 감축

참고2

면담자료(인사혁신처장 면담)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파견경찰관 파견종료 유예 등을 건의드립니다

□ 건의배경

- 각 시·도 자경위 사무국에 정원 외 경찰관 추가 파견, 치안행정업무 수행
 - 모든 시·도 자경위 사무국에 업무량 고려 없이 경찰정원 3명 일률 배정됨
 - 경찰 3명으로는 자경위에 부여된 치안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파견 운영 중

※ 시·도별 추가 파견 경찰관 현황 : 모든 시·도에서 경찰관 추가 파견 운영 중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원	5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현원	185	22	13	10	14	11	8	10	12	10	9	11	13	10	8	8	9	7
추가파견	+134	+19	+10	+7	+11	+8	+5	+7	+9	+7	+6	+8	+10	+7	+5	+5	+6	+4

- 단, 파견기간 종료('22.8월)를 앞두고 일괄 파견복귀 시 치안행정 차질 우려
 - 정원 외 파견경찰관 파견기간이 6개월에 불과('22.2~8월)하고, 파견기간 종료 직전
 - 현재 추가 파견 경찰관 전체 일괄복귀 논의 중으로, 대시민 치안행정 차질 우려

※ 서울 자경위 정부건의 시('22.4~6월) 기관별 입장

- ▶ (행정안전부) 새 정부 공무원 증원 최소화 기조로 인해 정원확대 곤란
- ▶ (인사혁신처) 파견정원 확보 등 상황변화가 없어 추가 파견연장 곤란

□ 파견경찰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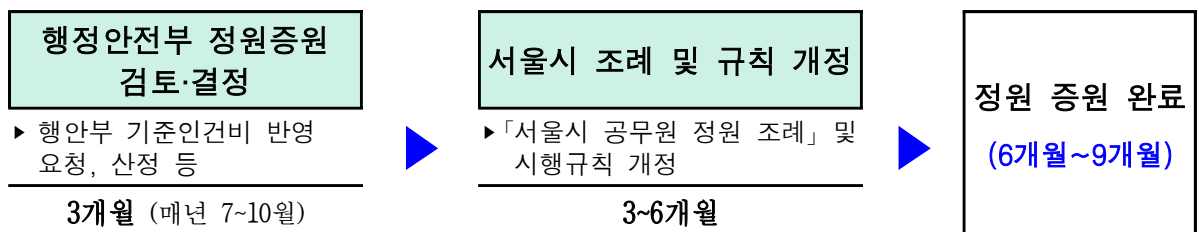
- 파견사유 발생시 기관장이 파견하되, 1년이상 파견시 인사혁신처 협의 필요
 - 시·도 자경위 경찰 파견사유 :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제1호)
 - 파견절차
 - <1년 미만> 파견요청(시·도) → 경찰청 승인 → 파견
 - <1년 이상> 파견요청(시·도) → 경찰청-시·도 협의 → 경찰청-인사혁신처 협의 → 파견

□ 경찰관 추가파견 필요성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치안사무 관련 지휘·의결 등 **실질적 경찰행정 수행**
 -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자치경찰사무’의 기획·집행 등 관련 전반사항을 책임지고 수행 중으로, 지자체 소속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찰행정을 수행하는 기관
- 자경위로의 파견은 ‘경찰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일반적인 파견과 성격 상이**
 - 일반적인 파견은 ‘한시적인 타 기관업무 지원’인 반면,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휘·운영 등 ‘경찰 본연의 업무’로,
 - 자경위로의 경찰 파견은 외형은 ‘파견’ 형태이나, 각 경찰기관 내부 근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일반 파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 적정 경찰인원 검토 없이 **정원 일률 배정은 내용적·절차적으로 부당**
 - 적정한 정원산정 절차 및 근거 없는 일률적 정원 배정은 심각하게 불합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사전협의 없이 제정안 공개('20.12.11), 지자체 의견 반영 없이 12.31 제정
- **인수위 국정과제** 및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도 **파견경찰관 현원 유지 및 현원 정원화는 필수적임**

□ 일반직 정원 증원·대체 - 소요시간이 길고 치안품질 저하 우려

- 지자체 일반직 정원 증원은 행안부의 지자체 정원증원 반영(기준인건비),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가 많고 소요기간이 장기임**
 - 서울 등 지자체 정원은 행안부 ‘기준인건비’ 통제를 받아, 기준인건비 우선반영 필요
 - 이후 서울시 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원반영



※ 서울시는 정원 외 파견경찰관(19명) 만큼 일반직 일괄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 입장

- 또한 현재 파견 경찰관이 수행 중인 업무는 실질적인 ‘경찰행정’ 업무로, 일반직이 대체 수행 시 **정책수립 및 집행절차 지연 등 치안품질 저하, 행정공백 등이 우려됨**

- 지자체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은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 및 인사·감사 등 다방면에서 상이하여, 일반직이 대체하기 어려움

※ **시·도 자경위 주요 소관사무** (경찰법 제24조)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평가 및 시책 수립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고충심사 등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등

→ 각종 경찰행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필요하여 현재 파견경찰관이 해당 업무 수행 중

- 대시민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찰행정의 전문가인 경찰관들을 사무국에 적정 수 배치, 자치경찰 정책의 원만한 수립·집행 필요

건의사항

- ◆ 《단기》 **파견근무기간** 등은 **시·도자경위-시·도경찰청간 협의 결정**토록 조정 건의
 - ▶ 지역의 치안사항을 시·도경찰청-자경위 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정원 증원 시 까지 경찰관 파견인력 및 기간을 양자간 협의하여 결정·처리토록 조정함이 타당
- ◆ 《중장기》 현재 사무국에 **파견된 경찰 현원을 정원으로 증원** 반영 추진
 - ▶ 현행 파견 경찰인력은 시·도-시·도경찰청간 업무분석 및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적정 인원으로, 업무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전원 정원화 요청 중(행안부)

□ 건의 개요

- 개 요 : '22. 7. 8. (금) 대통령실(자치행정비서관실) 면담 시 추가 논의된
행정안전부 전환사업의 예산 확보 관련 행안부 건의사항 전달
- 방 법 : 서면 건의 (행정안전부 자치행정비서관실 유승렬 총경)

□ 주요 내용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건의 내용 ('21.7.11)
 - (단기) '23년 예산편성 관련, 행정안전부의 공식적 운영기준 시달 건의
 - ▶ 행정안전부 보전기준액 현실화 및 기관운영비 반영을 위한 기준 정비
 - ▶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전환사업 신규 수요에 우선 반영되도록 권고안 시달
 - (중장기) 자치경찰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건의
- 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대통령실 답변 ('21.7.12)
 - (대통령실) 행안부(정책협력과)와 협의회 건의사항 전달, 의견 청취
 - (행정안전부) 위원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 및 수용의 어려움 의견 개진
 - ▶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의거 4년간 한시적 비용보전 목적으로 재정지원
 -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통령과의 만찬 시 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중앙정부 간섭 자제를 건의,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침을 추가 시달하기 어려움

⇒ (자치행정비서관) 행안부의 어려운 여건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예산편성의 어려움에 공감, 서울시 예산편성 부서에 협조 건의해 보겠음.
- 행안부에서 확정·통보한 전환사업 기준액 폐지 추가 건의 ('21.7.13)
 -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협의조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행정안전부 시각과는 달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개별적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임
 -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함에 있어 빠른 안착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검토 재요청
 - 추가적인 기준 시달이 어려운 경우, 21년 행정안전부에서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금의 기준금액 확정 통보('21. 10. 5)” 된 기준금액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건의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안전한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23년 자치경찰 예산편성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행안부) '23년도 자치경찰 사무 보전금 확정 통보 ('21. 10. 5)
 - － 서울시 기준, '22년 국고보조금 152억 대비 19억 과소 산정된 133억 통보
 - ▶ 전국 기준 : '22년 국고보조금 1,299억 → '23년 보전금 1,133억 (166억 감)
 - ▶ 통보 시점이 '22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전으로 '21년도 국비 기준 적용
- (지자체) 행안부 보전금이 '23년 예산편성 기준화 → 자치경찰 예산 확보 곤란
 - － 서울시 예산부서는 행안부 보전금 133억을 기준으로 한 '23년 예산편성기준액 통보
 - ▶ 서울경찰청에서는 전환사업 관련 예산으로 '22년 152억에서 '23년 208억으로 56억 증액 요청함에 따라 1차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애로사항 발생
 -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공통 사항임
 - － '22년 국고보조금 수준(152억)으로 상향 편성해도 물가인상분 등 반영이 미지수
 - －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분('21년 대비 4.3%)을 활용 지자체 내부에서 협의·조정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자원 확보를 위해 개별 대응하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불분명한 재정부담 기준) 자치경찰 사무 예산 관련 국가·지자체 입장이 상이
 - － 국가와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은 있으나, 자치경찰 사무의 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 (기획재정부) 자치경찰사무의 예산편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 ▶ (市예산부서)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편성 주체는 국가
 - －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기관·부서 간 이견 조정, 협의 등 행정력 낭비 심화

건의사항

◆ 《단기》 '23년 예산편성 관련,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적 운영기준 시달 건의

- 자치경찰 사무 보전금을 '22년 국고보조금 및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편성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보전기준액 현실화** 시달
-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 관련 **기관운영경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 신규 수요에 우선 반영 되도록 권고안 마련 시달**

※ 서울시 지방소비세 징수액 : '22년 약 2조 1,982억 추정('21년 1조 8,243억)
(지방소비세 인상분 2.7%('22년)로 환산 시 약 3,000억 이상이 전환사업 보전액)

◆ 《중장기》 자치경찰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경찰교부세” 및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건의**

- 자치경찰 비용보전은 한시적 지원(23년~26년)으로 이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치안행정 편차 발생** 우려
- 교통 과태료·범칙금 등을 지자체로 이전(교부세)하여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원 확보 필요

※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 교통 과태료·범칙금 평균 금액 : 1,601억원

3

「자치경찰사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 관련 논의

□ 주요내용

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

- 협의회를 대통령령상 법정단체로 전환, 법령에 근거한 안정적 운영 가능

②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구성(안 제15조의2)

-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효율적인 정책협의를 위한 공식기구
-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장(2인 공동의장 체제), 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소속 국장급 부서장으로 구성

③ 서면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등 회의방식 규정(안 제13조 ⑤, ⑥)

-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일상적·반복적 안전 서면의결 가능
-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방식 규정

□ 건의사항 ※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자유토론 진행

○ (서울안)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구성원 관련

개정안	수정안
제15조의 2(자치경찰 정책협의체) ③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경찰청장 2. 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소속 국장급 부서장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15조의 2(자치경찰 정책협의체) ③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경찰청장 2. 위원장협의회 대표자 3. 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소속 국장급 부서장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5. 위원장협의회 대표자가 지명하는 공무원

1 개정 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1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안 제15조)

- <개정 이유> '21. 8월 旣 출범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대통령령상 법정단체로 전환하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 법령에 근거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목적 및 구성>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상호 間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적 협의회 설립
- <기능> △자치경찰제도 추진 관련 공동 현안 대응 △자치경찰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자치경찰 제도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등 사업 시행
 - ※ 현행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관상 기능과 동일하게 규정
- <위임> 대령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장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②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안 제15조의2)

- <개정 이유>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間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 － 자치경찰제 관련 중앙-지방협의체인 ‘자치경찰 정책협의체’¹⁾를 공식기구화하여 양자 간 협력을 구체화·실질화하고자 함
 - ※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관련 협의(「경찰법」 제24조 ① 15.)를 위한 공식적인 소통의 장 마련
- <목적 및 구성> 경찰청과 제15조에 따른 위원장협의회 間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를 설치하고,
 - － △경찰청장 △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소속 국장급 부서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2人 공동의장 체제)
- <기능> △주요 치안정책의 수립·운영 관련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관련 협력이 필요한 사항 △자치경찰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 <운영> 대령에 △의장의 직무 △의견의 청취 △간사 △실무 위원회 등 정책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 － 대령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여 정책협의체 운영에 유연성 확보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방식(안 제13조제5항, 제6항)

-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안 제13조제5항)
 - － 코로나 19로 일상화된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규정(안 제13조제6항)

1)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의 차별화를 위해 ‘협의회’가 아닌 ‘협의체’로 명명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
<u><신설></u>	<u>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
<u><신설></u>	제15조(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u>② 위원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u> 1. 자치경찰제도의 추진과 관련한 공동 현안에 대한 대응 2. 자치경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신 설>

- 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및 건의
4.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
계 구축
5.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교류
및 정보의 공유
6. 그 밖에 위원장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위원장협의회의 조직·운
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자치경찰 정책협의체)

- ① 경찰청과 제15조에 따른 위원
장협의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
의를 위하여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
다.
- ② 정책협의체의 의장은 경찰청장
과 위원장협의회의 대표자가 공동
으로 한다.
- ③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구성한다.
1. 경찰청장
2. 안전과 관련된 경찰청 소속 국
장급 부서장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④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주요 치안 정책의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제도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협의체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의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정책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체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

<p><u>제15조(실무협의회)</u> (생략)</p>	<p><u>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한 1명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협의회 대표자가 지명한 1명이 된다.</u></p> <p><u>⑧ 정책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체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u></p> <p><u>제15조의3(실무협의회)</u> (현행 제15조와 같음)</p>
--------------------------------	---

4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관련 논의

□ 논의배경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관련 행안부 장관 인터뷰(연합뉴스, '22.7.14.)
 - － 자치경찰 실질화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이원화하는 것인데 인원과 예산이 문제이고, 그래서 자치지원과를 만들어서 집중해보려는 것”, 세종과 제주, 강원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것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22.7.15.)

-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 신설, 3과(과) 총 16명 규모
 - 총괄지원과(34급 또는 총경)-중요정책, 법령 국무회의 상정보고,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 인사지원과(총경)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등
 - 자치경찰지원과(총경 또는 4급)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 ◇ 행정안전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 ◇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등 경찰 인사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 경찰제도발전위원회(총리소속 자문위) 구성, 심층 검토 필요사항 논의

□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의견

- 제주 자치경찰위원장(발표자료 : 붙임 1~2)
- 강원 자치경찰위원장(구두 발언)
 - ※ 세종 자치경찰위원장 사임으로 공석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22.8.2.)
 - ※ 현재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관련 행안부 장관 발표가 예정된 것은 없으며, 실무선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인력·예산 관련 법·제도 개선 → 시범사업 시행('24년) → 성과분석 후 실시('26년) 등으로 계획 중. 다만 행안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일정 변경은 가능(행안부 자치분권제도와 김인경 사무관)

□ 추진배경

- '22. 7. 1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주와 강원, 세종에 이원화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 언급

▶ 이상민 장관, “현재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섞여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가야하며, 제주·강원·세종 등 3개 특별자치시·도에 우선 도입 후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22.7.15, 서울신문, 강원도민일보 등)

※ 시범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8.2.) 이후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될 것으로 전망

-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이 예상되는 제주·강원·세종에서 제주의 시범운영 결과(’18.~’20.)*를 토대로 관련 법령·제도 등을 사전 정비, 차질 없는 시범운영에 대비 필요

* 제주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운영

❶ 기 간 : 2018년 4월 ~ 2020년 12월

❷ 내 용 : 제주경찰청의 생활안전(지역경찰 112신고처리 포함)·아동청소년·교통 사무와 인력 268명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이관(인력 파견),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

❸ 결 과

- 시범운영 기간 중 특별한 치안상의 문제 없었음
- 지방·치안행정 융합 사례 발굴(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전담경찰관 등)
- 일원화 경찰법 시행으로, '20.12.31, 파견자 전원 복귀

□ 검토 사항

-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시범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가 해당 특별자치시·도지사의 사무로 법률에 명시되어야 가능

⇒ 「제주특별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로 “자치경찰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강원·세종특별법에는 규정 없음(법률 개정 필요사항)

-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 당시 문제점 개선, 차질 없는 운영 필요

⇒ △「경찰법」상 자치경찰사무 전부 이관 △지역경찰은 일원화 운영 △별도 청사 확보 △파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 등

□ 대응방안

- 제주·강원·세종특별법 개정,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사무로 명시
 - ※ 「경찰법」상 명시된 자치경찰사무와 一致 필요
- 특별법에 시도경찰청의 사무와 인력을 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제주특별법」 §91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 자치경찰 청사 등 사무여건 마련
 - 제주의 경우, 기존의 자치경찰단 조직이 있어 제주경찰청장과의 업무협약만으로 즉시 이관이 가능했으나, 강원·세종은 사실상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하는 것으로 청사 등 사무여건 마련 불가피
 - ※ 시범운영 시에는 기존 국가경찰의 청사를 공동 이용, 장기적으로는 독립청사 추진
 -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現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시범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비 지원 등 선결 필요
-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 젊은 직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필요
 - ※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시 파견자 268명 중 여경(4.5%), 경장(3.7%), 순경(2.2%) 저조
 - 지역경찰의 경우 효율적인 112신고 대응 등을 위해 일원화 필요
 - ※ 지역경찰 이원화 시 각자 관할 증가, 112신고 관할 모호 등 문제점 발생
 - 파견 인력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지침 제정
 - ※ 파견 인력에 대한 자체 직제 개편 등
 - 치안공백 방지를 위한 시도경찰청과의 협업
 - ※ 자치·국가경찰 간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위한 협약 등

□ 향후계획

- 「제주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 백서」 각 위원회 공유
- 제주·강원·세종위원회 및 위원장협의회 차원의 합동 T/F 구성, 행정안전부의 로드맵 작성과 법률 개정 등에 공동 대응

□ 단계별 시행

- 제도변화로 인한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1~4단계에 걸쳐 단계적 시행

구 분	1단계 ('18.4.30.)	2단계 ('18.7.18.)	3단계 ('19.1.31.)	4단계 ('20.2.5.)
이관사무	제주동부서 생안·여청·교통	동부서 지역경찰 + 서부·서귀포서 생안·여청·교통	서부·서귀포서 지역경찰 + 주취자응급센터	지역경찰 추가
이관인력	27명	+96명 (123명)	+137명 (260명)	+8명 (268명)

- 4단계 기준, 파견인력 268명은 제주경찰청 총 현원의 1/7 규모

구 분	계	협력관 (1)	생활안전 (203)							112 (9)	여성청소년 (15)			교 통 (40)		
			CCTV 관제센터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법	유실물	치안센터	지역경찰	주취자응급센터		학폭	교력	실아	외근	싸이카	내근
계	268	1	3	3	1	3	4	183	6	9	12	3		29	7	4
제주청	15	1	3					2		9						
동부서	88			1	1	1	1	63			4	1		10	4	2
서부서	84			1		1	3	56	3		4	1		11	3	1
서귀포	81			1		1		62	3		4	1		8		1

- 시행에 앞서,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합동 언론브리핑, 자치지역 경찰관서 도입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홍보 실시

□ 자치·국가 지역경찰관서 < 총 31개소(국가 24, 자치 7) >



참고 1

서울특별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모델안”

〈 '18.2.6. 자치경찰 학술용역 결과보고회 시 발표 내용 요약 〉

1 조직(단위) : 시·도경찰청 조직을 시·도로 이관

- 추진논거1 : 주민혼란과 비용 발생 최소화, 광역적 경찰 수요 반영
 - 전국단위 경찰청을 제외하고 광역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만 설치해 경찰 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경찰 서비스 이용에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 최소화
- 추진논거2 : (舊)경찰법 제2조 충실히 반영 ※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청 설치
 - 광역단위 자치경찰 설치로 광역과 기초 분리로 인한 비효율과 치안 불균등성 완화

〈추진모형〉

- ✓ 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경찰조직을(경찰서 및 파출소 포함) 자치경찰로 전환. 별도 자치경찰 신설 불필요

2 사무·권한 : (원칙)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예외)국가사무

- 추진논거1 :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경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착되어 있는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 수행
 - 현장에서의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권 필요
- 추진논거2 : 치안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지자체 종합행정 구현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학교·지하철 보안관,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시·도가 시행 중인 치안 사업과 자치경찰제를 연계하여 완전한 종합행정 구현

〈추진모형〉

- ✓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 제외한 모든 경찰사무 이관. 수사권 부여

③ 인사 :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자치경찰 관리

○ 추진논거 : 정치권력에 종속된 국가경찰의 폐해 극복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찰이 겪고 있는 정치권력에의 종속성을 극복
- 자치경찰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하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방경찰청장 추천권 등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추진모형〉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도경찰청 관리

-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 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
-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3배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경찰서장은 필요시 시·군·구청장과 협의)

④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세원 발굴

○ 추진논거 : 자치경찰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추가적인 재정부담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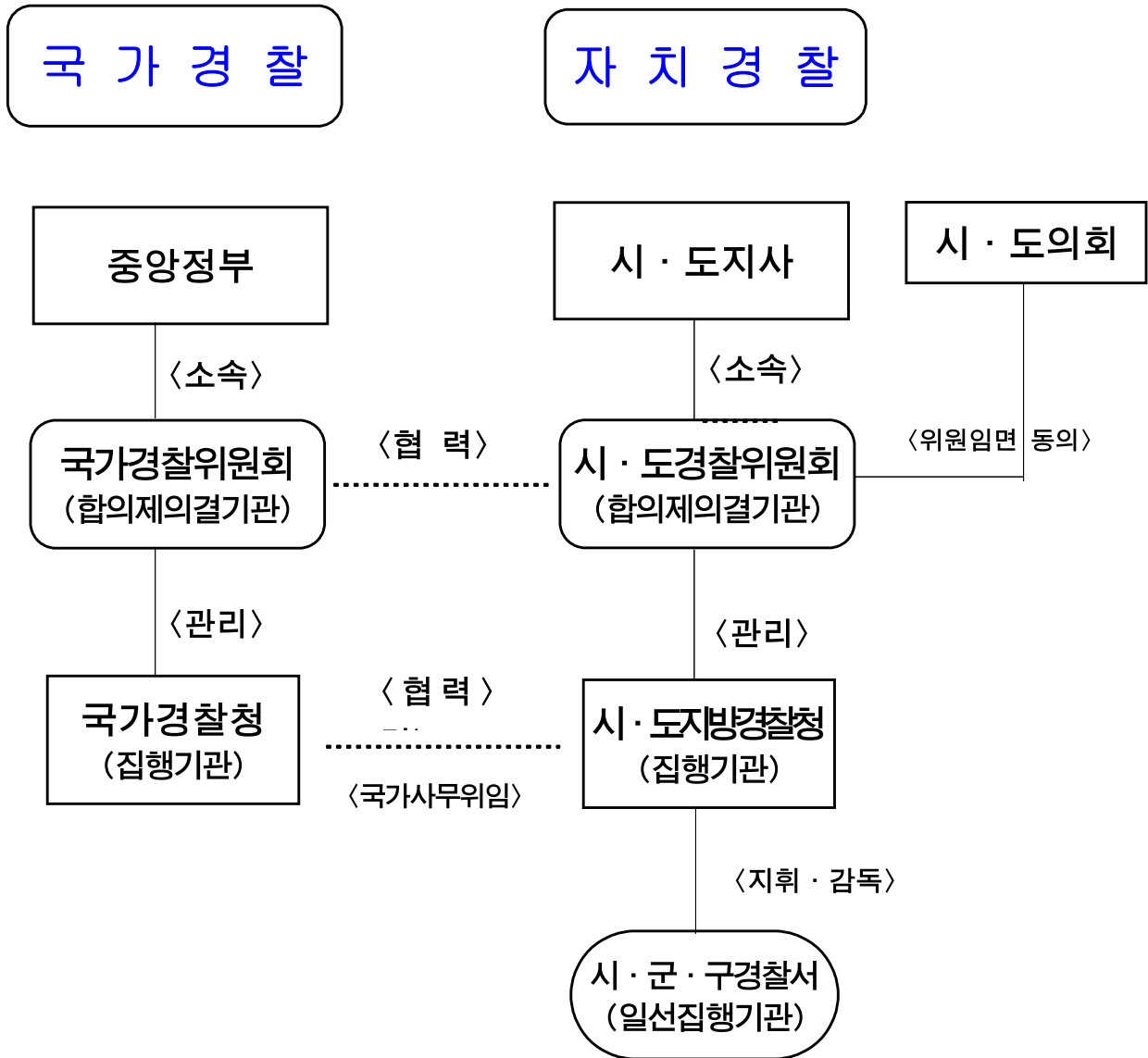
- 자치경찰로서 신분을 명확히 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추진모형〉

✓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국가재정 지원 및 지방세제 개편으로 충당

- (자치경찰 신분) :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보수·근속·수당 등 대우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자체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
- (자치경찰 재정) : 초기에는 국가예산을 ‘(가칭)치안특별교부금’으로 활용(국고보조), 중장기적으로는 자주재원화(범칙금, 벌금, 지방소비세 인상 등)와 병행

〈 연방제 수준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



참고2

홍익표 의원(안) ('19.3월)

구분	내용
모형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 부칙으로 경찰직무응원법 등 55개 법률 개정
조직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직무수행 - 자치경찰 조직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신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 국가경찰 소속으로 '순찰대' 설치, 국가경찰이 112 종합상황실 운영(자치경찰공무원 파견)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찰의 임무는 경찰의 임무로 총칙으로 결정, 자치경찰사무는 구체적 열거 -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 등)·교통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 담당 △성폭력 일부, △학폭·가폭,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특별사법경찰 등 -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발견 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인계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경찰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지사 지명 1, 의회 추천 2(與野 각 1), 법원 추천 1,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 -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가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은 신분 이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장비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 규정
상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장관·경찰청장 모두 자치경찰 조언·권고·지도·시정명령 등 가능
시행 경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시행일 : 법률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 시범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 및 기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자치경찰본부 등에 국가경찰공무원 전출)

위원회별 제출 안건

1

[서울]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 결과공유

□ 행사명 : ‘시민과 함께한 서울 자치경찰 1년, 성찰과 도약’

- 시민·경찰·전문가와 함께 서울 자치경찰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성찰>
-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공유하여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 도모 <도약>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2. 7.12(화) 14:00, 본청사 대회의실(3층)
- 참석인원 : 180여명(치안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경찰, 시민 등)
 - 자치경찰위원, 시장, 시의회의장, 교육감, 서울청장, 최불암(市 홍보대사) 참석
 - 경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시민정책자문단, 일반시민 등 참석

○ 행사순서

구분	행사순서	시 간	세부내용
<사진전> 13:40~13:50 (10')	① 자치경찰 사진전 관람	13:40~13:50 (10')	- 자치경찰 사진전 관람(1층) ※ 관람 후 이동(1층→3층)
<1부 : 기념식> 14:00~14:40 (40')	② 개회	14:00~14:19 (19')	- 국민의례, 행사소개, 개회사, 주요내빈 축하말씀
	③ 서울 자치경찰 1년의 발자취 영상	14:19~14:23 (4')	- 자경위 구성~현재까지 성과 및 자치경찰 위원 인터뷰 영상 상영
	④ 각종 시상	14:23~14:30 (7')	- 1주년 기념 유공경찰 표창(3명) - 1주년 기념 유공기관 표창(중부경찰서) - 1주년 기념 감사장(1개)
	⑤ 시민 인터뷰 영상	14:30~14:35 (5')	- 시민 인터뷰 및 제도 개선 촉구 영상 상영
	⑥ 제도 개선 결의대회	14:35~14:40 (5')	- 자치경찰 제도 개선 결의 플래카드
<2부 : 정책발표회> 14:40~15:10 (30')	⑦ 1주년 정책발표회	14:40~14:48 (8')	- 서울 자경위 비전 및 정책발표
	⑧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14:48~15:10 (22')	- 시-경찰 협업 우수사례 발표(3건) - 서울 반려견 순찰대 사례발표
< 장내 정리 및 휴식(15:10~15:20)>			
<3부 : 정책포럼> 15:20~16:40 (80')	⑨ 정책포럼	15:20~16:40 (80')	- 포럼주제 :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무리	16:40	- 퇴청 안내 및 장내 정리

□ 개최결과

총 평

- ◆ 서울 자치경찰 1주년을 기념하여 각계 각층에서 참여한 서울 자경위 최대 행사로, **자경위-시민-경찰-전문가**가 함께 어우러진 **축하와 발전의 장**
- ◆ 다양한 영상과 정책발표·우수사례 발표 등 **풍성한 볼거리와 내용** 준비
- ◆ 제도개선 퍼포먼스, 정책포럼 등을 통해 참여자들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새 정부 ‘자치경찰권 강화’ 촉구 계기 마련**
 - 다양한 행사 세션을 통해 자치경찰이 서울시민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앞으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알 수 있는 뜻깊은 자리 (경찰관 의견)
 - 행사에 참석하니 자치경찰이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게 됨. 치안 유관단체도 지속 노력하겠음. 유익한 시간이었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 의견)

제도개선 필요성 시사

- ◆ ‘진정한 자치경찰제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논의 및 개선촉구**
 -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인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이러한 사례가 없으며, ‘지방화’에 반대하는 ‘국가화’에 해당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정식 출범 후 자치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확대하겠음(이기우 좌장)
 - 주민이 참여하는 법적·제도적 통로가 협소하여 기초단위 참여 강화 필요(이상훈 발제)
 - 지구대·파출소 국가경찰 소관, 시·도 임용권 제한 등 제도적 한계 개선필요(황문규 발제)



서울 자치경찰 사진전 관람



인사말씀(서울시장)



제도개선 결의 플래카드



정책포럼

□ 추진배경

- 지난해부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연장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난 3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청간담회 후속조치로서 권역별 토론회와 연계
- 독자적인 법령체계 및 조직이 있는 제주에서부터 완전한 이원화 모델 선제적 적용을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산 촉구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2.9.1.(목) ~ 9.2(금), 2일간 / 제주오리엔탈호텔, 도내일원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참가자 규모 : 자치경찰 관계자 등 2백여명
- 포럼 주제 :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

구 분		내 용
공 식 행 사	개 회 식 및 기조강연	· 일시 : 2022. 9. 1.(목) 10:00~11:25 / 규모 : 200명 내외 · 개회사(제주, 시도협, 서울)/환영사(도지사/도의장)/축사(행안부장관, 경찰청장, 행안위원장) · 성과 및 경과보고(서울) / 기조강연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1세션	· 일시 : 2022. 9. 1.(목) 13:00 ~ 14:40 · 주제 :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와 현재(좌장: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 - 발제 1: 자치와 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최종술 동의대 교수) - 발제 2: 현행 자치경찰제의 진단과 과제(황문규 경남사무국장) - 토론자: 강소영(건국대), 윤태웅(시도협),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제2세션	· 일시 : 2022. 9. 1.(목) 14:50 ~ 16:30 · 주제 : 제주가 선도하는 자치경찰제의 미래(좌장:이기우 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 발제 1: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와 한계(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 발제 2: 제주자치경찰 모형의 발전방안 모색(이상훈 대전대 교수) - 토론자: 박종승(전주대), 추가 토론자 1~2명 섭외 중
	리셉션	· 환영오찬 : 2022. 9. 1.(목) 11:25 ~ 12:55 - VIP 오찬(44명), 일반참가자 오찬(200명) · 만찬 : 2022. 9. 1.(목) 18:30 ~ 20:00 - 시도위원장 만찬 : 제주위원장 주제, 시도위원장 17명 - 역할참가자 만찬 : 시도협사무총장 주제, 역할참가자 10명 내외
부대행사		· 전국시도위원장협의회 임시회의 : 2022. 9. 1.(목) 16:40 ~ 18:00 · 현장방문 활동 : 2022. 9. 2.(금) 10:00 ~ 14:30

□ 주최자별 역할 분담(안)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1. 행사총괄 운영 2. 개회식 운영 3. 환영리셉션 - VIP 오찬, 일반참가자오찬 - 시도위원장 만찬 4. 기조강연자 섭외	1. 토론회 운영 및 비용 지출 - 각종 수당 및 교통비 지출 - 토론회 자료집 제작 등 2. 행사 운영비 일부 부담	1. 자치경찰제 주요 추진경과 및 성과 보고 2. 임시회의 운영
※ 중앙부처, 국회 및 자치경찰 주요 관계자 초청 공동 노력		

□ 추진상황

- 특별 초청대상자 섭외 추진
 - 도지사, 도의장, 지역국회의원(3명) 참석 요청 ※ 가 일정 확보
 - 행안부장관 참석 요청 중(행안부 자치경찰추진TF팀)
 - ※ 경찰청장, 행안위원장 참석여부 최종 확인 후 보고 필요하나, 현재 인선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기조강연자 섭외 추진
 - 김병준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가 일정 확보
- 세션별 좌장, 발제자, 토론자 섭외(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추진사항)
 - ※ 제주지역 시범운영에 따른 실무진 섭외 요청 중

□ 향후계획

- (시도위원회) 사전 등록대상자 확정 : ~ 7월말까지
- 특별 초청대상자 참가 일정 확정 및 초청장 발송 : ~ 8월 2주까지
- 자료집(인사말씀, 프로그램 안내, 발제 및 토론문) 제작 : ~ 8월 3주까지
- 홍보 및 행사 준비 등 : ~ 8월말까지

□ 협조사항

- (시도위원회) 사전참가자 확정명단 제출 ※ 별도 통보 예정
- (회장단)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행안위원장 방문 참석 협조
 - ※ 경찰청장, 행안위원장 인선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 확정되면 방문인사 겸 참석요청이 필요

붙임1
 시도 위원회별 참석현황 ('22. 7.15 현재)

시도	참석(계)	위원장 (1일차)	위원장 (2일차)	일반참가 (직원)	숙박현황	비고
계	59	15		44		
서울	6	○		5	오리엔탈	1박
부산	4	○		3	오리엔탈	1박
대구	4	위촉시참석		3	오리엔탈	1박
인천	5	○		4	미정	
광주	3	○	×	2	라마다	2박
대전	3	○		2	라마다	1박
울산	4	○		3	오리엔탈	1박
세종	보류	상태				
경기남부	4	○		3	팔레스	2박
경기북부	3	○		2	미정(오리엔탈 대기중)	2박
강원	3	○		2	미정	
충북	4	○		3	오리엔탈	2박
충남	2	○		1	오리엔탈	1박
전북	7	○	×	6	오리엔탈	2박
전남	4	○		3	라마다	1박
경북	3	○		2	라마다	2박
경남	4	○		3	오리엔탈	2박

☐ 계획인원

구분	계	일 반 참 가				VIP	기타		
		소계	제주도	전국시도 위원회	시도지사 협의회		소계	수행 원	기자
참석 인원	<u>250</u>	<u>185</u>	110	44	31	<u>44</u>	<u>21</u>	11	10

☐ VIP 참가 : 44명

- 제주자치경찰위원 7명
- 시도자치경찰위원장 17명
- 시도지사협의회장 1명 / 사무총장 1명
- 도지사 1명 / 도의장 1명 / 지역국회의원 3명 / 도의회 상임위원 7명
- 행안부장관 1명 / 경찰청장 1명 / 행안위원장 1명
- 기조강연자 1명
- 제주경찰청장 1명 / 자치경찰단장 1명

☐ 전국시도위원회(일반참가) : 44명

☐ 시도지사협의회 : 31명

- 사무처 직원 : 20명(홍보단 10명 포함)
- 패널관계자 : 11명

☐ 제주도 : 110명

- 제주위원회 24명
- 제주도청 10명
- 제주도의회 10명
- 자치경찰단 20명
- 제주경찰청 20명
- 소통자문단 20명
- 고충처리위원회 6명

3

(강원)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2. 10. 18.(화) / 강원도 춘천시
- 주 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 주최 : 협의 필요
- 주요내용 : 강원도자치경찰 시행 1주년 기념식, 발표 및 토론
* 행안부 장관과 대화(오찬) 추진
- 참석규모 : 100명(자치경찰 관련 기관,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등)
- 포럼주제 :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발전 전략 모색
- 해외 사례분석,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
- 초청국가 : 2개국(일본, 독일)

□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 내용
오전	(제1회의) 발제1. 자치경찰과 지역주민 연계 및 협력 강화 방안 발제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강원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 자치경찰 시행 1주년 기념행사 및 개회식(퍼포먼스, 특별대담, 축하 등) VIP 오찬 / 중 식
오후	(제2회의) 발제1. 일본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제도적 역할 :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제2. 독일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제도적 역할 :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회의) 발제1.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 및 협력 강화방안 발제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강원자치경찰의 현재와 미래 : 제도적인 측면과 과학·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만찬 및 폐회	

□ 협조사항

- 국제학술 심포지엄 공동주최
- 분권위원회, 행안부, 경찰청,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시도자치경찰위원장님 국제학술 심포지엄 참석: 10.18.(화)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 변경:(예정)10.20.(목)→~~(변경)~~ 10.17.(월)

□ 포상금 개요

- (배경) 자치경찰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목표 달성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포상금) 제공 필요
- (포상) 도내 경찰서 치안수요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급
 ※ 포상금 : 2,400만원 / 그룹별 1위(500만원), 2위(400만원), 3위(300만원)
- (근거) 「경찰법」 제24조 및 제35조와 「강원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

□ 법령해석 요청사항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성과를 평가하는바,
- 강원도지사가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내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에 포상금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여부
 (‘22. 5. 10.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은 수여할 수 없는바,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찰서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에 포상금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을 회신(‘22. 7. 15. 중앙선관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 ② (생략)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서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자치경찰사무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